

처리는 해야겠고... 주민은 반발하고... '난감'

'RDF 동의안' 광주시의회 상임위 통과 본회의 상정은 보류

광주시 "환경정책에 꼭 필요... 물리칠 수 없다"
남구 주민들 "왜 우리동네에만 집중되냐" 불만
10여일 유예기간... 원포인트 개회로 처리할 듯

광주시의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Refuse Derived Fuel·이하 RDF)사업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이하 환경복지위)는 16일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논란이 됐던 'RDF사업 민간투자 공모계획 동의안'을 가결했지만, 본회의 상정은 보류했다.

환경복지위는 이날 동의안 처리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해 6명의 의원 중 5명이 찬성함에 따라 동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남구 양과동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주민들과 더 협의시간을 갖는다는 이유로 본회의 상정을 미뤘다.

이날도 양과동 주민들은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동의안 처리를 반대하며 항의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쟁점=RDF시설 설치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시로서는 상무소각장 폐쇄와 함께 향후 광주시의 환경 정

책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어서 물리칠 수 없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광역 위생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목재 폐기물 처리시설,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이 들어서는 남구에만 집중되는 것에 가장 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광주시는 RDF시설을 지은 뒤 상무소각장을 폐쇄할 계획이어서 RDF시설 여부에 따라 상무소각장 폐쇄도 결정되는 만큼 광주시의 환경정책으로는 가장 중요한 사업중 하나다.

시는 "RDF시설은 광역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불에 타는 물질을 선별·분리해 발전회사 등에 연료로 판매하고 타지 않는 물질만 매립하는 선진방식으로 에너지 확보와 매립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간 용역을 통해 RDF사업이 시의 환경정책 방향과 부

합하고 민·관 합동법인 설립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RDF시설 설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시와 남구 대촌동·송암동 주민들과의 충분한 주민지원 대책 협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망=광주시의회는 이날 동의안 처리에 앞서 10여 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상임위원 환경복지위원회는 광주시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동의안 처리에 일정 부분 동의하고



몸싸움 RDF 남구 설치에 반대하는 대촌동 주민들이 16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동의안' 상정을 반대하며 사무처 직원들과 서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내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있지만, 주민들과 더 협의를 한 뒤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병문 환경복지위원장은 "항후 환경정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동의안 처리를 늦추면 늦출수록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만, 해당 지역민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광주시와 주민 간 더 많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둔 뒤 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시의회는 향후 '원·포인트' 의회 개회를 열어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와 주민들 간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반대 주장이 거세 본회의 통과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한편 시는 오는 2015년 말까지 남구 양과동 위생매립장 인근 부지 2만 1900㎡에 하루 800t의 생활쓰레기를 신재생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RDF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상무소각장을 대체할 이 시설은 제3섹터(민·관 합동법인) 방식으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 1103억원 가운데 45%를 민간투자자로 공모하고, 나머지 50%는 국비, 5%는 시 출자로 충당한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에 기회 오나

MB 대선공약으로 시작된 민주주의 전당
광주에 짓겠다 약속 어기고 서울로 결정
광주 등 강력 반발에 부지 재검토하기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서울로 잠정 결정했던 한국민주주의전당 건립 부지를 재검토하기로 해 광주 유치 가능성이 열렸다.

국회 안전행정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운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16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오는 5월께 '한국 민주주의 전당 범국민추진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서울로 정해진 민주주의전당 건립부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민주주의전당 건립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다. 당초 광주와 경남 마산 등이 유치 경쟁을 했으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해 서울시청 남산 별관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과 민주주의 관련 당위성 부재 및 랜드마크화 불가능 등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가 'MB정부' 때부터 공들여온 '민주주의전당' 유치를 놓고 지역간 경쟁이 벌어지면서 광주-서울-마산 '삼각벨트 분산 설치'를 주장하는 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광주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광주에 민주주의 전당을 짓겠다고 대선 공약으로 약속해 5년간 관련 사업을 추진해 온 만큼 '삼각벨트 분산 설치'를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애초 계획대로 광주교도소 일대 부지에 '민주주의 전당' 유치를 추진 중이다.

강문태 광주시장장은 최근 청와대를 방문해 5·18 민주화 운동 등 민주주의의 역사와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주에 들어셔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임 대통령 시절부터 대선 공약에 포함된 것으로, 광주에 유치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jkpark@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013년 추경예산 재원 배분



추경 진통... 與 "정책 타이밍 중요" 野 "이대론 부실·졸속"

정부 17조3000억 규모 편성... 내주 본격 심사 착수

여야는 정부가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함에 따라 내주 초부터 상임위별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커서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정책의 타이밍'을 강조하며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촉박한 일정에 따른 부실·졸속심사를 우려하며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양당은 17일 '여야정 협의체'를 열어 추경 규모와 재원조달 방식을 협의하는 데 이어 내주 초 상임위별 심사를 한 뒤 이르면 내주 후반부터 예산결산특별위를 가동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심의하는데 며칠 걸리지 않는다"며 "4월 내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협주 대변인도 논평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경의 배분과 집행은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해야 할 예산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지리멸렬한다면 또다시 '식물국회', '무능국회'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보도자

료를 내고 "17조3000억원 중 세출 확대는 2조9000억원에 불과하고 특히 일자리 창출 예산은 4000억원에 그쳤다"며 "이는 수용하기 힘든 안으로, 대폭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도 "정부 추경안은 그동안 민주당이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보전용, 부동산대책 등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면 세수감소 보충에 집중돼 정부의 경기회복 의지 자체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추경안의 4월 국회 내 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치권에선 추경안 처리를 위한 5월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추경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입 축소·세출 확대' 쪽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현재 세급과 세외 수입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 경정예산(12조원)을 줄이고, 그 축소분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출 예산으로 돌려겠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세입 경정보다는 세출 경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변 정책위의장은 "세입보전 규모를 축소하고 일자리 창출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1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7조 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박진표기자 jkpark@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호박에 줄 그은다고 수박되나?

항공권 예약문의: 1588-2682 홈페이지 www.keair.co.kr



강원도와 광주광역시 90%로 가까워졌습니다.

양양국제공항 ⇔ 광주공항 국내선 운항

- * 양양공항 출발 12:20 ◯ 광주공항 도착 13:50
- * 광주공항 출발 14:20 ◯ 양양공항 도착 15:50



설악산 무등산



양양국제공항(2018평창동계올림픽 공항) 광주광역시 농장으로 현지 이벤트!

■ 2013.4.20(토) : 16:30 ~ 17:30 총창로 일원		
행사명	장소	비고
거리캠페인	총창로 일원 4거리	강원도지사, 양양군수
경품 추첨	광주우체국 영일과 앞	왕복 무료항공권, 무료 숙박권, 농특산물 등
박 터트리기	강원도·광주광역시 교류협력 기원	

- 2013.4.21(일) : 08:00 - 12:00 광주상무시민공원
- 제10회 호남제마리톤대회 "양양-광주간 국내선 운항" 홍보
- 강원도 관광 홍보부스 운영